

“농가실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오인환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기계공학과)

지난 7월 1일자로 축산분뇨에 관계되는 법이 강화되었다. 벌써부터 입건이 되었느니 벌금을 물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며,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면 양돈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는 유예기간을 1년 이상이나 두었었고,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미리 예상을 하였으면서도 대처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거기에도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여야 할 지 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가축분뇨처리방식의 보급을 살펴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톱밥발효돈사가 완벽한 방법인 것처럼 등장하여 몇 년간 보급되더니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톱밥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잘 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는 돼지에는 속수무책이며, 이러한 위험부담을 더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후에는 저장액비화방법이 정부의 권장에 힘입어 해당 양축농가의 5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보였으나 강화되는 법과 함께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액비로 이용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고 그대로 방류하기에는 허용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도기적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시설한 양돈농가의 손실이 컸다. 축산기술연구원소에서 개발된 톱밥도양여과상도 농촌지도소 등을 통하여 조금 보급이 되더니 자원화의 시책에 밀려 현재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활성오니법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농가도 있으며, 특히 전업 규모 이상의 규모가 큰 양돈농가에서는 발효건조법을 도입하며 이용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진다. 톱밥가격의 상승으로 가장 비싼 처리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방류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원화 정책에 따라 자원화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지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자연법칙에 순응하여 가축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동안도 행하여졌으나 체계를 잡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연 자원화할 수 있는 농장이 얼마나 되는 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한 편이나 지역적으로 가축분뇨 수급에 차이가 크다. 경기도 지역은 가축분뇨의 발생이 많아 농경지 ha당 질소부하량은 285 kg이나 되는 반면에 전남지역은 원예산업의 발달로 가축분뇨의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질소부하량은 92kg/ha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적인 수급조절을 맞추어 줌으로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수분함량이 낮은 양질의 퇴비는 원거리의 수송도 가능하겠지만 슬러리, 액비 등은 운반비용관계로 주변 농가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주변여건이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떠한 길을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문하게 된다. 여기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점이 제기된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가축분뇨수급은 어떤지, 잉여분뇨의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등이다. 현재의 상황에 미루어볼 때 전량 자원화가 가능한 양돈농가는 살아남고, 그 외의 양돈농가는 생존의 기회가 희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육류수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양돈농가는 사료비의 상승과 축산폐수법의 강화에 의하여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률적인 보급지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농가의 사육규모와 입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기준과 방법도 다양해져야 한다. 한 예로 환경부의 규정에 배출원 단위를 마리당 12ℓ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6ℓ와 비교하면 두배나 된다. 그 결과로 저장탱크의 용량이 과대하게 되어 양돈농가의 시설비 부담만 과중하게 된다. 축사내에서의 분뇨처리방식, 즉 스크레파로 분리처리를 하느냐 슬러리의 혼합처리방식이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진다. 또한 습식급이기의 사용여부도 배출량에 영향을 준다. 이상과 같이 양축농가의 입지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처리기술개발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분뇨처리기술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으며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별로 꾸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방법별 시범농장을 지정하여서 양축농가들에게 현장교육 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